

연계와 단절의 딜레마에 직면한 이명박 정부의 초기 대북정책 : 조기처방의 필요성과 대안

서보혁

(코리아연구원 기획위원/ 이화학술원 평화학연구센터 연구위원)

- I. 첫 시련을 맞고 있는 대북정책
- II. 북한 먼저 행동해야?
- III. 어긋난 코드 맞추기
- IV. 세 가지 대북정책 원칙의 문제
- V. 연계딜레마: 북핵으로 모든 문이 닫힌 남북관계
- VI. 단절의 딜레마와 무시전략이 만날 때
- VII. 9.19 공동성명 정신과 어긋나는 북핵정책
- VIII. 남북간 기합의·진척 사항을 부정하는 앙상한 경험
- IX. 인도인권 분야: 높아진 관심, 그러나 대안 미흡
- X. 원칙있는 대북 관여정책에 대한 기대
- XI. 정책 제언

출범 1개월을 넘어서고 있는 이명박 정부가 내치와 외치, 양쪽에서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조 각 과정에서 도덕성에 일부 흠집이 있어도 경제살리기만 해낼 수 있다면 문제없다는 ‘자신감’ 은 세계경제의 전반적인 상황 악화로 줄어들고 있다. 미국을 비롯한 주변 4개 강대국 주재 대사 임 명 지연이 말해주듯이 ‘실용외교’ 는 엔진장치 결함으로 아직 시동이 걸리지 않고 있는 듯하다.

I. 첫 시련을 맞고 있는 대북정책

통일부는 3월 26일, 대통령께 한 업무보고를 통해 2008년 전략목표로 ‘상생·공영의 남북관계 발전’ 으로 설정하고, 이를 위한 실행계획으로 ‘비핵·개방·3000’ 이행 준비, 상생의 경제협력 확대, 호혜적 인도협력 추진 등 3대 과제 하에 12개 목표를 제시하였다. 통일부의 업무 보고 자료

만 볼 때는 북한의 비핵화, 경제협력, 인도협력 등 전임 정부의 대북정책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볼 수도 있다. 다만 눈에 띄는 차이는 강한 자신감을 갖고 제시한, 북한의 핵 폐기 이후 북한의 개방 및 국민소득 3000달러 달성 지원 구상이다.

그러나 ‘비핵개방3000’으로 알려진 대북정책이 직면하고 있는 도전이 현 정부의 능력을 가장 먼저 시험하고 있는 듯하다. 남북대화는커녕 개성 남북경협사무소의 남측 요원들의 철수(3. 27)와 이어 북한의 미사일 발사시험(3. 28), 북한 군부의 남북대화 중단 공언(3. 29) 등 북한의 구체적인 반발이 일어나고 있다. 이 같은 현상에 대해 정부측은 당당한 대응, 통상적 훈련, 선제타격을 언급 없었음으로 각각 반응하고 있으나 핵문제 우선 해결 원칙이 빚어낸 결과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북한의 이런 반응은 지난 1개월 동안 남한 새 정부의 대북정책을 관찰해온 북한의 명시적 반응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끌기에 충분하다.

물론 죽다가 살아난 통일부의 대통령 업무보고가 지난 26일에 있었으니까 새 정부의 대북정책을 평가하기는 아직 시기상조인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인수위 활동 기간을 포함하여 대통령과 통일부 장관 등이 보인 입장 표명은 새 정부의 대북정책 방향을 가늠해보는 데 적지 않은 암시를 던져주었다. 북한인권에 대해 “할 말은 하겠다”는 대통령의 공언, “북핵 타결 안 되면 개성공단 확대 어렵다”는 요지의 통일부 장관의 발언, 북의 핵 기지(선제) 타격을 거론한 합창의장 내정자의 발언, 이 모두는 이명박 정부의 대북관 및 대북정책 성향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지도 모른다. 다른 분야와 비슷하게 대북정책에서 있어서도 새 정부는 출범 초기부터 큰 도전에 직면하고 있는 것 같다. 왜 그럴까? 아래에서는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 방향과 몇 가지 주요 사안을 중심으로 ‘조기’ 점검 해보고 대안적 의견을 제안해보고자 한다.

II. 북한 먼저 행동해야?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은 ‘비핵개방3000’ 구상으로 압축되어 있는데 북한의 정상국가화, 남북경제공동체 실현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 구상의 특징은 첫째, 논리상 ‘북한이 먼저 ~하면 남한이 ~해주겠다(if ~, then ~)’는 조건부 혹은 선후관계로 되어 있다는 점이고, 둘째, 북한을 시혜 혹은 계몽의 대상으로 인식하고 있고, 셋째, 군사안보문제가 먼저 해결되어야 경제, 사회문화 영역의 문제 해결에 접근할 수 있다는 이슈간 위계(issue hierarchy)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이다. 마지막으로 새 정부의 대북정책은 김대중, 노무현 등 관여정책(engagement policy)을 통해 남북관계를 개선해온 기존 정부의 대북정책과 단절한 가운데 출발하고 있다.

이명박 정부의 이같은 대북정책 특징은 자칫 잘못하면 북한 혹은 다른 대내외 변수와 맞물려 정책추진 환경을 악화시킬 수도 있다. 첫째, 남한의 상응 조치 혹은 유인 없이 북한에 행동 변화를 기대하는 것은 순진한 발상이고, 북한의 행동 변화를 압박하는 것은 북한의 반발을 가져와 의도하지 않은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둘째, 북한을 평화와 공영의 실질적인 동반자로 대하지 않고 접근할 경우 주관주의적 정책 결정 및 집행 과정을 거쳐 자족적이거나 파괴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 셋째, 북핵문제 해결에 대한 일차적 관심, 즉 이슈위계현상은 이명박 정부만이 아니라 6자회담 참여국들의 공통점이라는 점에서 흥미를 끈다. 그러나 이슈들 사이의 중요도 차이를 의미하는 이슈위계가 문제 해결의 시간적 선후를 반드시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점을 지적할 필요가 있다. 노무현 정부는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제일 대북정책 목표로 삼으면서도 당국간 대화, 경제협력, 인도적 협력 등을 병행 추진하였다. 이와 달리 이명박 정부는 북핵문제의 해결 이전에는 다른 문제해결에 소극적일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아 보인다(인권문제의 경우 아래 논의 참조). 이 대조적인 접근 중 어느 것이 정책 효과 면에서 더 유의한지는 입장에 따라 다를 수 있겠으나, 분명한 것은 이명박식 접근의 경우 대화 채널의 부재를 가져오고 있다는 사실이다.

Ⅲ. 어긋난 코드 맞추기

이명박(나아가 남한) 정부의 대북정책 결정요인 중 미국은 대단히 중요한 변수임에 틀림없다. 4월 중순으로 예정된 한미 정상회담은 한미 동맹관계의 재확인, 미래 공동이익에 대한 공유, FTA 타결, 무엇보다도 대북정책에서의 한 목소리 내기가 예상된다. 대북정책을 둘러싼 한미 협력과 관련해 두 가지를 언급할 수 있다.

먼저, 대북 인식과 대북 정책을 구분할 필요성이다. 부시 대통령의 부정적 대북 인식은 변함없이 없지만, 부시 행정부의 대북정책은 주요 정책결정집단과 전략적 요인의 변화에 따라 강경에서 협상 노선으로 이동하였다. 워싱턴에서 두 대통령이 낸 대북정책상 한 목소리는 대북 인식에 기반할 가능성이 높는데, 그것을 한미간 대북정책을 둘러싼 위치, 이익, 전략의 동질성으로 오해하지 않아야 할 것이다.

둘째,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이 흘러간 부시정부의 강경정책과 유사할 수 있다는 우려가 벌써부터 들린다. 부시정부의 대북정책은 이미 궤도 수정을 하였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가 북한 핵문제 해법으로 (9.19 공동성명에 합의한 상응조치 없이) 북한의 행동을 먼저 요구하는 것은 북한의 반발은 물론 미국과 북한의 비핵화 협의 과정에서 소외될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요컨대, 이명박 정부의 북핵 우선 해결 접근은 정책 전환을 이미 전개하고 있는 현 부시 정부의 대북정책이 아니라 소멸된 과거 강경접근의 꼬리를 따라가는 잘못된 코드 맞추기라고 지적받을 수 있다.

IV. 세 가지 대북정책 원칙의 문제

그러나 새 정부의 대북정책 효과를 걱정하기 이전에 정책원칙과 방향을 먼저 검토해보는 것이 순서일 것이다. 통일부는 3월 26일 대통령에게 한 <2008년 통일업무 보고>에서 통일정책 추진 원칙으로 ▷ 실용과 생산성, ▷ 철저한 원칙 하의 유연한 접근, ▷ 국민합의, ▷ 국제협력과 남북 협력의 조화 등 네 가지를 제시하였다. 이 가운데 ‘실용과 생산성’은 비용 대비 성과, 북한주민의 삶의 질 향상 등 다섯 가지 기준을 제시해 설득력을 보이고 있다. 그에 비해 두 번째 원칙은 당연한 말로 보이고 세 번째, 네 번째 원칙은 구체적인 기준이나 방법이 제시되어 있지 않아 모호하게 들린다.

필자가 판단하기에 새 정부의 대북정책 원칙 혹은 방향은 실용주의, 보편주의, 상호주의로 요약할 수 있을 것이다. 대북정책에서 현 정부의 실용주의가 목표를 상실한 현실적응, 업적달성 위주의 접근으로 갈 것으로 예단할 필요는 없지만, 물리적 힘과 이분법적 판단에 근거한 ‘도덕적 현실주의’로 변질할 가능성은 미리 경계해둘 필요가 있다. 1)

보편주의는 남북관계를 특수관계로 과약하지 않고 “매우 투명하고 국제사회에서 인정하는 틀 위에서 적극적으로 대화할 준비를 하게 될 것”, 북한인권문제를 국제적 보편규범에 입각하여 접근한다는 대통령의 발언에서 잘 나타나있다. 인수위의 통일부 폐지 방침도 이같은 시각에 기초하고 있었다고 할 수 있다. 대북정책을 남북간 특수관계의 시각에서만 접근하는 것은 분명 ‘글로벌 코리아’ 구상에 맞지 않고 평화와 통일의 도정에서 국제적 협력을 획득하는 데에도 한계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그 반대의 극단으로서의 보편주의는 상대의 조건과 입장을 무시하고 일방적 접근을 추진하는 절대주의적 접근으로 떨어질 함정이 있음을 경계하여야 한다. 실제 남북관계가 국가 대 국가의 일반적 성격과 분단국가로서의 특수성을 동시에 갖고 있다는 것은 상식 아닌가?

상호주의에 대한 관심은 각종 대북 지원이 기대한 만큼의 북한의 변화를 이끌어내지 못했다는 문제의식에 기초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이 대통령은 통일부 업무보고 자리에서 “북한도 (남한의 대북지원에) 상응하는 조건은 아니지만 인도적 차원에서 협력을 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새 정부의 상호주의는 1:1식의 주고받기식 접근과 장기적 차원에서의 북한변화를 기대하는 접근 사이의 어느 지점에 있을 소위 ‘호혜적 상호주의’라 이름 붙여볼 수 있다. 문제는 정부가 호혜적 상호주의를 추진할 ‘실용적’ 접근 방법을 제시하는 것이다.

V. 연계딜레마: 북핵으로 모든 문이 닫힌 남북관계

이상과 같은 점들을 염두에 둘 때 이명박 정부는 다음 두 가지 딜레마를 진지하게 고려하여 대북정책 추진전략을 수립하길 기대한다. 첫째, 연계 딜레마(linkage dilemma)의 문제이다. 연계 전략이 소기의 효과를 획득하는 데에는 두 개의 조건이 충족되어야 하는데, 하나는 일방과 타방이 각각 깊은 이해관계를 갖고 있는 사안이 대칭적으로 존재하여야 하고, 다른 하나는 (일방이 두 사안을 연계하여 동시 해결을 추진할 때) 타방이 일방으로부터 배신당하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할 정도의 신뢰가 형성되어 있어야 한다. 이런 두 조건이 모두 충족되지 않으면 상대방으로부터의 반발이나 대내적 비판에 직면함으로써 연계전략의 효과는 크게 약화되거나 심지어는 역효과를 초래할 수 있다. 일방의 연계전략이 깊어갈수록 대안 모색의 기회가 줄어드는 대신 타방에게 대안 모색의 필요는 더 높아져, 결국 일방의 입지와 이익은 축소될 수 있다.

‘비핵개방3000’이 말해주듯이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은 남한의 ‘제일’ 관심사인 북핵 문제에 북한의 관심사인 경제 지원 및 협력을 연계하고 있다. 이때 북한은 자신의 ‘제일’ 관심사인 안전 보장을 미국으로부터 획득하고자 하고 있기 때문에 남북한의 이해관계가 대칭적인지 의문이고, 남북관계 신뢰가 어느 정도 (특히 새 정부 들어) 조성되어 있는지도 의문이다. 요컨대, 북핵문제에 집중시키고 있는 새 정부의 대북 연계전략은 현재로서는 실효성이 극히 희박한 연계 딜레마의 위험에 놓여있다. 실제 남한의 연계전략이 계속될 경우 남북관계 경색, 북핵문제 해결과정에서 남한의 소외 등 연계 딜레마의 위험이 나타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을 것이다. 북핵에 올인하고 있는 연계전략에 따라 모든 남북관계의 문은 닫아버린 꼴이 되었는데, 그것은 이명박 정부가 다양한 영역의 대북정책을 북핵 정책에 완전히 종속시키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북한의 핵 폐기 압박을 촉구하는 취지를 가진 이런 접근이 남한에게는 아무런 부작용이 없을까? 이명박 정부가 굳이 대북정책에 연계전략을 적용하려면 그 조건을 구비하는 것이 순서일 것이다.

VI. 단절의 딜레마와 무시전략이 만날 때

둘째, 단절의 딜레마로 부를 수 있는, 새 정부가 전임 정부의 대북정책과 엄격한 차별성을 기하려고 집착하는 가운데 초래할 수 있는 높은 기회비용의 문제이다. 이명박 정부는 ‘화해협력’, ‘평화변영’ 정책을 추진해온 이전 정부의 대북정책을 부정하는 듯한 인상을 주고 있다. 유명한 외교통상부 장관은 취임사에서 “외교라는 것은 지속과 변화를 어떻게 잘 조화하느냐가 중요하다”는 말했는데, 이는 대북정책에서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물론 새 정부, 그것도 이전 정부와 정책 성향이 크게 다른 정부가 등장하면서 기존 정책과의 차별성 보이려는 것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그것도 정도 문제이지 이전 정부의 대북정책을 전면 부정하거나 객관적 평가를 회피하는 것은 모든 분야에서 존재하는 정책의 연속성과 변화 중 하나만 취하는 선택적 편의주의라 지적

받을 수 있다.

북한의 핵실험을 포함하여 북한문제가 국제적 성격을 띠고 있다는 것은 현 정부가 강조하고 있는 바이다. 그런데 북한의 모든 정책행태를 이전 정부 탓으로 돌리는 것은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정치상의 구조적 제약을 특정 행위자로 환원하는 것이자, 그런 태도는 현 정부에게도 부메랑으로 돌아올 것이 분명하다. 전임 정부의 대북정책과 단절된 상태에서 북한에 대해 일방적인 자세로 접근할 때 (이미 직면하고 있는 바와 같이) 북한의 반발은 물론 대내적인 지지 기반을 축소하여 새 정부의 의욕에 찬 대북정책 집행을 스스로 제약할 수도 있다.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이 성공하는 길은 기존의 정책성과를 흡수하고 한계와 문제점을 비판하고, 대내적으로 수용가능하고 상대방이 타협가능한 대안을 제시하는 데서 찾을 수 있다. 그런 점에서 새 정부가 새로운 정책 비전을 제시하는 것은 필요하지만, 이전 정부의 정책 결과를 면밀히 평가하여 계승하고 혁신할 것을 균형 있게 취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Ⅶ. 9.19 공동성명 정신과 어긋나는 북핵정책

새 정부의 대북정책을 각론으로 나눠 살펴보기에는 이른 감이 있지만 최근 상황은 관망 자세를 허용하지 않는 것 같다. 먼저, 북핵문제이다. 이명박 정부가 북핵문제 해결을 대북정책의 제일 순위로 잡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핵문제 우선 해결 없이 경제협력 등 다른 모든 사안들의 추진을 스스로 묶어두고 있다는 데에 문제가 있다. 이명박 대통령이 핵문제 해결 의지를 강력하게 표명하는 과정에서 남북기본합의서를 언급한 것은 큰 실수였다. 발언의 취지는 남북한 한반도비핵화 공동선언을 지칭하는 것이었다. 그 결과 이 대통령은 기본합의서를 언급하였지만 그것이 담고 있는 정신과 남북관계의 성격 및 원칙, 상호관심사에 대한 협력 정신을 무시하였던 것이다. 대통령의 관련 지식과 참모들의 보좌능력을 의심케 하는 대목이다. 이명박 정부가 핵문제에 올인 하던 서도 핵 신고문제 타결, 6자회담 개최 등 현 북핵국면 타개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은 거의 실종되어 있는 것 같다.

외교통상부가 3월 11일 대통령께 한 업무보고에서 나타난 북핵문제 해결 방안은 대단히 소극적이라는 지적을 면하기 어렵다. 외교부는 북핵문제 해결을 위해 정상외교 활용과 ‘비핵개방 3000’ 구상 가동을 들고 있다. 정상외교는 6자회담 재개를 위한 고위실무급 외교와 보완되어야 할 것이다. 더욱 큰 문제는 ‘비핵개방3000’ 구상을 북한 핵불능화→핵신고 이행→핵폐기 과정의 실질적 진전 등 세 단계를 거친 후에, 그것도 이행 ‘준비’에 착수한다는 것이다. 9.19 공동성명에 입각하여 진행되고 있는 비핵화 이행과정이 일괄타결에 기초한 동시행동 원칙에 따른 것임을 감안할 때, 새 정부의 대북 핵정책은 북한으로부터 진정성을 의심받을 뿐만 아니라 북미 회담 진

전시 한반도 정세 변화에 소외될 가능성을 스스로 열어놓고 있는 위험한 접근이다. 실제 부시 행정부는 BDA 문제 처리과정에서 대북정책 방향을 협상으로 선회한 후, 상황 타개를 위한 양자회담을 갖고 최근에는 식량지원 50만 톤 제공의사를 표명하며 북한의 비핵화를 끌어내려고 노력하고 있다. 이것은 (부시정부 초기 일방주의적 대북접근을 모방하고 있는) 이명박 정부의 ‘先북핵 포기, 後지원협력’ 과는 좋은 대조를 보여주고 있다.

Ⅷ. 남북간 기합의진척 사항을 부정하는 양상한 경협

경제협력 분야야말로 현 정부가 이전 정부의 대북정책을 전면 부정하는 대표적인 분야이다. 이와 관련해 2007 남북공동선언 제5항은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설치, 개성공업지구 2단계 개발, 개성-신의주 철도와 개성-평양 고속도로 개보수 등에 합의하였다. 정상회담 이후 남북은 총리회담, 경제협력공동위원회 회의 등을 열어 합의사항 이행방안을 논의해왔다. 남북 경제협력은 김대중, 노무현 정부를 거치면서 관광, 1차산업 전반은 물론 2차산업 일부(조선업, 경공업, 광업 등)로 확대되고 있고, 여기에는 현 정부가 자원외교 차원에서 관심을 갖고 있는 지하자원 개발 협력 사업도 포함되어 있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는 경제적 타당성, 국민 합의 등 여러 조건을 내세워 경협 합의사항을 부정하고 있다. 통일부는 업무보고에서 남북공동선언상의 주요 경협 합의사항을 제외한 채 논란이 되고 있는 ‘나들섬 구상’ 구체화를 포함하여 5가지 사항을 ‘상생의 경제협력 확대’ 과제로 제시하고 있다. 그런 가운데 김하중 통일부 장관이 개성공단 입주기업 대표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북핵문제가 계속 타결되지 않고 문제가 남는다면 (개성공단 사업을) 확대하기 어렵다” 는 말을 한 것이다. 김 장관의 발언은 합참의장 내정자의 북핵기지 공격 발언과 겹쳐 북한측이 이명박 정부에 대한 비판을 행동으로 옮기게 한 계기를 제공해준 꼴이 되었다. 김 장관의 대북정책 관련 첫 공식 발언은 현 상황의 어려움을 반영한 것이지만, 그가 통일부 장관인지 의심케 한다는 비판을 받은 것도 사실이다.

통일부 업무보고에서 이명박 대통령은 “금강산 사업과 개성공단 사업은 개선의 여지가 많기는 하지만 계속되어야 한다” 고 말해 남북경협의 대표적 두 사업은 지속하는 것으로 예상되지만, 여기서 짚고 넘어갈 것은 남북경협은 사업의 성격상 호혜적이고 통일 대비 투자이지 북한에게만 이로운 지원 사업이 아니라는 점이다. 예를 들어, 김하중 장관이 지목한 개성공단사업은 남한의 중소기업과 서부지역 안보에 적지 않은 이점을 제공하고 있다. 이 사업은 북핵실험 등 어려운 가운데서도 유지되어 2006년부터 생산과 수출이 크게 늘어나고 있고, 2007년 말 현재 1단계 개발이 완료되어 본격 운영 단계에 진입하고 있다.

또 하나 지적할 점은 호혜적인 경제 협력사업일지라도 그 밑받침이 되는 남북관계가 불안정하고 경색될 경우 경험은 발전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가령, 남북한 당국 모두 자신의 정치적, 전략적 필요에 따라 경험을 이용할 수도 있다. 또 새 정부의 북핵 중심의 대북정책이 계속될 경우 김하중 장관의 발언은 정부의 기본입장을 대변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경험은 북핵과 관련 있다거나 북핵보다는 덜 중요한 영역으로 볼 수도 있지만, 시각에 따라서는 북핵문제와 별개로 병행 추진할 수도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만약 경험이 북핵문제에 종속되어 계속 제한을 받을 경우, 남한이 획득할 이익 감소는 물론 경험이 북한의 대남 의존과 한반도 긴장완화에 주는 역할까지 거두어들이는 꼴이 될 것이다. 또 이명박 정부가 '북핵 해결 없이 경험 없다'는 입장을 견지할 경우, 창조적 실용주의에 입각하여 안전보장과 경제이익을 동시에 획득하지 못하는 무능력을 뽐내려는 처사라는 비판을 받을 수도 있을 것이다.

IX. 인도인권 분야: 높아진 관심, 그러나 대안 미흡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이 전임 정부의 그것에 비해 특징적일 뿐만 아니라 긍정적으로 보이는 부분이 인권 및 인도분야에 대한 정책적 비중을 높인 점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당선자 때 북한인권에 '애정 어린 비판'을 해야 한다고 말했고, 3월 11일 외교부 업무보고에서는 "북한 인권 문제를 다루는 것은 대북전략 측면이 아니라 소위 인류의 인간적, 보편적 행복의 기준을 갖고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소신을 밝혔다. 정부의 북한인권정책 변화는 최고지도자의 말로 그치지 않고 실제 행동으로 나타났다. 이 대통령 취임 이후 정부는 제7차 유엔 인권이사회 개막일(3. 3) 기조연설을 통해 북한의 인권상황이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국제사회의 우려에 대하여 북한정부가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하였다. 이 연설은 비록 국제기구 석상에서 "인류보편적 가치로서 인권의 중요성에 입각하여" 밝힌 것이지만, 공개적인 방식으로 북한을 겨냥한 것이라는 점에서 이전 정부의 정책에서 크게 '발전'한 것이다. 정부는 또 위 인권이사회에 상정된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의 임기 1년 연장안에 찬성 투표하였다. 북한이 남한정부 대표의 발언과 찬성 투표에 부정적 반응을 보인 것은 쉽게 예상할 수 있었다.

그러나 새 정부의 북한인권정책 변화는 북한내 인권문제에 대한 국제 협력, 유엔에서의 북한인권 논의 지지 외에는 사실상 새로운 것이 없다. 통일부가 업무보고에서 '호혜적 인도협력 추진' 사업의 하나로 제시한 '북한 인권 개선 노력'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적시하고 있지만, 그 계획이란 초라하기 짝이 없다. 결국 이명박 정부의 새로운 북한인권정책이란 유엔에서의 북한인권 결의안에 찬성하는 것 말고는 새로울 게 없다. (결의안 찬성 투표가 북한의 실질적 인권개선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아니면 자족적인 의사표시인지는 여기서 논외로 한다.) 통일부가 인도협력사업

으로 분류한 이산가족 및 국군포로·납북자 문제 해결,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대북 지원의 분배 투명성 제고 등에 관해서는 이전 정부의 입장 및 대책과 차별성을 보이는 것이 없다.

북한인권 관련 대통령의 높은 관심을 반영하여 인수위 시기 이 문제에 관한 논의가 관련 일부 시민단체 관계자들과 한나라당 의원들이 참여한 가운데 몇 차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 자리에서 다양한 북한인권 개선 방안들이 나왔지만 뚜렷한 결론을 내지 못한 것으로 보도되었다. 그것은 인권이 인류보편적 가치임에도 불구하고, 국가 차원의 대외정책의 일환으로 다뤄질 때 (우리는 여기에 분단상태에 있는 정치적 실체를 상대한다는 특수성이 추가되어) 나타나는 정치적 민감성과 전략적 의미를 말해주고 있다. 그런데도 새 정부가 북한인권 관련 보편적 관점을 강조하는 것은 한국의 국제적 위상, 대내적 지지를 더 의식한 것으로 볼 수도 있다. 북한의 실질적 인권 개선을 달성할 수 있는 방안은 여전히 남아있는 과제인 셈이다.

X. 원칙있는 대북 관여정책에 대한 기대

지금까지 보인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은 북핵문제를 중심으로 한 안보정책에 의해 압도되어 있는 형국이다. 분명한 상대를 상징하고 있는 대북정책은 안보를 주요 사안으로 포함하고 있지만 다양한 영역의 관심사들도 함께 갖고 있다. 북핵문제 해결에 높은 정책적 비중을 갖고 접근할 때, 다른 남북관계 사안들이 영향을 받는 것은 불가피할 것이다. 그러나 지금과 같이 (북한에 일방적 요구를 하는 방식의) 북핵 접근에 남북관계 현안을 걸어놓고 있는 것은 북핵문제 해결, 남북관계 발전, 북핵 이후 한반도 정세 대응, 대내적 지지 획득 등에도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할 것이다.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에 관한 가장 심한 최근의 비판은 현실적 목표, 방법론, 국가정체성이 모두 없다는 지적이다.²⁾ 그러나 그런 지적의 저변에 깔려 있는 핵심은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에 북한이 없다는 것이다. 즉 북한은 남한이 제시한 대북정책 방향에 순응했을 대상이지 대화와 협력을 통해 상생하는 파트너가 아닌 셈이다. 이명박 정부는 부시 정부가 폐기한 일방주의적 대북 압박 및 무시 전략을 재현하고 있다.

현재 한미 양국 행정부는 북핵문제의 우선 해결에 공감대를 갖고 북한을 일면 설득, 일면 압박하고 있다. 소위 ‘8월 시한론’ 이것은 3월 하순 방미 일정 중 유명환 외교장관의 발언에서 나온 것인데, 미국의 대선 일정상 8월이 지나면 의미 있는 결정을 내리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그래서 북핵 신고를 수주 내에 마무리 짓고 4월에 6자회담을 재개해 8월까지 북핵 폐기를



어느 정도 진전시켜야 부시 대통령 임기내 미북 관계정상화와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 논의 등을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그것이다. 8월 시한론³⁾은 미국의 입장이지만 북한의 입장은 아니고, 남한의 입장마저 아닐 수 있다. 그러나 북핵 신고를 넘어 폐기 단계로의 진입을 기대할 때 북한의 협력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한미간 협력이 중요하다. 현재 미국은 대북 식량지원 의사 표명 등 대북 설득 역할을 하고 있다. 반면에 한국은 북한에 인내심 고갈, 북핵 없이 경험 없다는 등 압박을 주로 구사하고 있다. 한미간 역할분담인지 알 수 없으나 북미대화가 진행되는 반면 남북대화가 없는 상태에서 이 같은 한미간의 다른 대북접근은 북핵문제 교착, 해결 등 어떤 경우에도 남북관계에 유리하게 작용하지 않을 우려가 있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이명박 정부가 무시전략을 조기 수정해 다양한 대북 대화채널을 가동할 필요를 여기서 발견할 수 있다. 노무현 정부의 대북정책과의 차별성은 이전 정책을 전면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흡수, 여과시키는 자신감과 포용력에 있다.

XI. 정책 제언

이상의 논의는 짧은 기간 이명박 정부가 밝히고 있는 대북정책 방향과 관련 현안에 대한 입장, 그것도 공개된 내용만을 대상으로 한 것이다. 그런 한계에서나마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은 다음과 같이 요약해 볼 수 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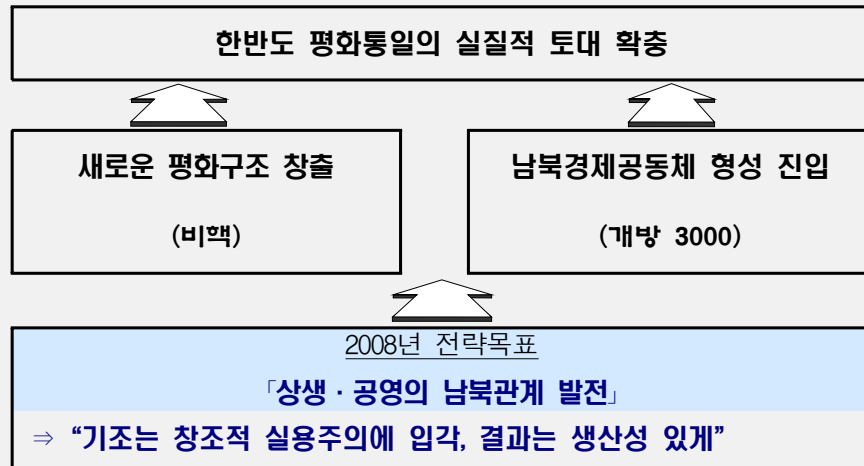
- ▶ 원칙: 실용주의, 상호주의, 보편주의
- ▶ 전략: 연계, 무시
- ▶ 정책: 핵문제 해결 우선 하의 경험 조정, 인도인권 비중 증대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아래에서는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 방향과 정책 대안을 보완한다는 취지에서 관련한 몇 가지 제언을 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정책원칙, 추진전략, 세 가지 정책 현안에 대한 의견으로 되어 있는데, 정책 타당성 제고와 전략적 접근에 일말의 보탬이 되길 기대하는 바이다.

XI.-1. 정책원칙 보완

정책원칙의 중요성은 그것이 정책 추진전략, 구체적인 각 정책 방향을 규정하기 때문이다. 사실 정책원칙은 정책결정자의 신념과 철학을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 자체를 비판할 수는 없을 지도 모른다. 그러나 공공정책의 경우 정책원칙 혹은 이념은 정책 효과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보완할 필요가 있다.

<그림 1> 통일부 2008 업무보고: 정책비전



이명박 정부는 실용적 대북정책이 추구하는 가치를 제시하고 5년 임기를 고려하여 달성할 중간 및 최종 목표를 제시해야 할 것이다. 통일부가 밝힌 2008년 전략목표도 이명박 정부 5년의 대북정책 목표 속에서 설정되어야 할 것이다. 만약, 통일부의 업무보고 자료 중 정책비전(<그림 1> 참조)에 제시된 ‘한반도 평화통일의 실질적 토대 확충’ 이 현 정부의 대북정책 최종 목표이고, 그 아래 병렬적으로 제시된 ‘새로운 평화구조 창출(비핵)’ 과 ‘남북경제공동체 형성 진입(개방 3000)’ 이 중간 목표라고 이해할 수 있는지는 알 수 없다. 혹은 ‘새로운 평화구조 창출(비핵)’ 과 ‘남북경제공동체 형성 진입(개방 3000)’ 의 결과 혹은 의미를 ‘한반도 평화통일의 실질적 토대 확충’ 으로 해석할 수도 있을 것이다.⁴⁾ 만약 그렇다면 ‘평화통일의 실질적 토대’ 가 남북관계 발달 수준 등을 고려할 때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는지를 청사진으로 제시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중간 목표’ 에도 두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 첫째, 그림은 두 중간 목표가 병행 추진되는 것으로 오해할 수 있도록 되어 있지만, ‘비핵개방3000’ 은 분명 시간상 선후의 관계를 가지며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둘째, 두 중간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비핵화, 북한 개방 및 국민소득 향상만이 아니라 다양한 과제들이 기다리고 있다는 점이다. 평화체제, 경제·사회 통합 등이 대표적인 과제이다. 여기서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 목표 달성을 위해 이전 남북간 합의를 적극 활용할 필요성을 갖게 된다.

상호주의는 어떤 상대이든지 상호작용이 발생하는 관계에서는 상호 균형된 이익 추구를 취하는 데 필요한 행동규범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 이명박 정부의 상호주의는 대통령의 언급처럼 1:1식 상호주의와 미래 이익을 염두에 온 접근 사이의 어떤 지점에 서려고 하는 것 같다. 다만, 남북간 체제 차이 및 체제 능력의 격차 등을 고려할 때 상호주의는 장기적 차원에서의 북한 변

화를 추구하는 전략 틀에 기반하여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실제 여전히 남북관계가 매우 유동적 이므로 현 정부가 강조하듯이 ‘원칙 있는 유연성’ 이 필요하다. 이때 원칙을 위에서 언급한 현 정부의 5년 대북정책 목표(시간대별, 분야별)로 치환할 수 있다면 그 목표 달성을 위한 창의적 접근으로서의 ‘호혜적 상호주의’ 가 가능할 것이다.

보편주의 원칙은 이전 정부가 남북관계를 특수관계에 치중하여 왔다는 비판과 대북정책 추진 상 국제협력의 필요하다는 실용적 판단에 근거하고 있다고 보인다. 이해할 수 있는 대목이다. 그러나 대통령이 존중 의사를 밝힌 남북기본합의서는 남북관계를 특수관계로 규정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남북관계는 이 두 가지 측면을 모두 갖고 있기 때문에 양자택일의 문제가 아니다. 남북관계를 보편주의적 관점(그 이론적 문제점을 별도로 하더라도)에서만 본다면 남북협력상의 애로와 통일지향의 약화, 국제적 영향력의 증대에 직면할 수 있음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구체적인 대북정책에 있어서는 국제협력과 남북협력의 조화 원칙을 전략적으로 적용하는 접근이 필요할 것이다. 예를 들어 핵, 인권 문제는 국제협력을 상대적으로 더 추구하는 대신, 경제협력, 인도적 문제, 군비통제 분야에서는 남북협력에 더 힘쓰는 것을 검토해 볼 만할 것이다.

XI.-2. 추진전략 수정

새 정부의 대북정책 원칙은 보완한다고 하더라도 정책 추진전략은 대폭 수정되어야 할 것이다. 지금까지 나타난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 추진 전략은 ①북핵문제에 모든 대북정책 영역을 걸어 놓고 있다는 것, ②북한을 철저히 무시하고 일방적인 접근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 앞에서 지적한 북핵 연계전략의 위험성은 진지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북핵문제가 제일의 정책적 비중을 갖는다는 것과 그 문제에 다른 이슈들이 ‘종속’ 된다는 것은 다른 문제이다. 또 연계전략이 북핵문제 해결에 반드시 유용하다고 말하기도 어렵다. 거기에 (이전 정부의 대북정책과 크게 다른) 새 정부의 입장을 북한에 일방적으로 전달하고 북측에 따라오기를 요구하는 것과 무시전략이 결합할 때 나타날 결과는 어렵지 않게 예상할 수 있다. 우리는 지금 그런 우려의 단면을 보고 있는지도 모르고, 이를 방지한다면 부시정부의 지난 대북 강경정책의 실패에서 교훈을 얻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⁵⁾

1994년 제네바 기본합의가 웅변하듯이, 우리는 북핵문제 해결의 일차 변수는 북미간 이해관계의 타협 여부라는 점을 내키지 않지만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그 속에서 한국이 중재자, 촉진자 역할을 ‘적극’ 행사할 때 남북관계와 북미관계의 상호 병행발전이 가능할 것이다. 북핵 폐기까지 한미간 대북정책 목표는 비확산의 관점에서 일치할지는 모르나, 그 이후에는 북한을 어떻게 대할 것이냐를 두고 입장 차이가 가시화될 수 있다. 2006년 말 이후 부시행정부의 대북접근 방법의 변화는 이런 전망을 부각시켜 주고 있다. 한국은 이에 대비하여야 한다. 북핵문제에 올인 하여

다른 영역의 대북정책이 개접휴업 상태에 있고, 그동안 초보적이거나 쌓아온 남북간 신뢰가 물거품이 될 수도 있다. 정부는 북핵 연계 딜레마에서 벗어나 6자회담 등을 활용하여 북핵 폐기를 촉구하고 그 과정에서 한미간 정책공조를 취해나가면서도, 경제협력과 인도적 협력 등 다양한 분야에서 남북간 접촉을 전개해나가야 한다. 그래야만 상호 대화 분위기 속에서 북한에 직접 핵 폐기를 촉구할 수 있다. 지금처럼 모든 대화 채널이 중단된 상태에서 핵문제만 일방적으로 말하는 것이 현 정부가 설정한 평화구조 창출, 남북경제공동체 형성에 어떤 도움이 되는지 생각해 볼 일이다. 특히, 경제에 관해서는 정부는 그것이 시혜가 아니라 상생의 실험이자 북핵 폐기 이후 북한에 대한 전략적 투자라는 인식을 분명히 가져야 할 것이다. 현재 미국, 일본, 유럽연합, 국제경제기구 등이 비핵화 상황을 지켜보면서 무엇을 준비하고 있는지를 생각해보아야 한다.

북한을 대화와 협력의 파트너로 인식하고 북한에 그런 판단을 가지도록 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이와 관련하여 대통령을 포함하여 정부는 긍정적인 용어사용(terminology)을 할 필요가 있다. 여기에 2007 남북정상회담을 포함한 기존 남북간 합의사항을 '원칙적으로' 존중하되, 구체적인 추진 방침은 새로운 정책 요소들을 감안할 것이라는 신중적 입장도 검토해볼 가치가 있다고 본다. 이런 전향적 자세를 보이는 가운데 정부는 북측에 특정 계기를 활용하여 남북대화를 먼저 제의할 수 있을 것이다. 정부는 대북 인도적 지원이나 남북간 인도적 사안, 혹은 전반적인 현안 논의를 위해 적절한 형태의 회담을 제의할 수 있을 것이다. 남한의 대화 제의는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북한의 의혹 불식, 이해 도모를 기본 목적으로 하고, 향후 다양한 분야에서 활발한 당국간 대화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또 정부는 대북정책 결정 과정에서 국제협력과 남북협력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 통일부와 외교부의 역할 분담, ▷ 외교안보정책조정회의에 남북관계 및 북한 전문가의 기용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이상 대북정책 추진 원칙과 접근 전략에 대한 의견을 바탕으로 세 개의 주요 정책 분야에 대한 정책 제언을 간략히 하고자 한다.

XI.-3. 국제협력을 통한 비핵화 이행 요구

먼저, 북핵문제는 '9.19 공동성명 이행을 위한 제2단계조치(소위 10.3합의)' 이행을 위한 한국의 역할과 의무를 다하는 것이 중요하다. 물론 그것은 북한의 핵프로그램 신고 등 세 가지 비핵화 의무사항에 대한 상응조치를 말한다. 북한의 핵 불능화, 신고, 확산 금지를 실행시킬 방법에는 압박도 적용될 수 있지만, 9.19 공동성명 이행이 공동합의에 따른 당사국간 동시행동인 점을 고려할 때 자국의 공약사항의 성실한 이행과 타국의 공약사항 이행 촉구가 요구된다. 그런 점에서 이명박 정부가 핵 문제 해결이라는 궁극적 목표치를 내세우며 북한의 우선 행동을 요구하는 것은 사리에 맞지 않고 실효도 없다. 또 북한의 핵 불능화 작업이 80% 이상 진행되고 핵 목록 신

고문제가 협의 중인 시점에서 북미관계 정상화를 향한 조치와 중유 1백만 톤 상당의 지원이 어느 정도가 적정한지는 단정하기 어렵다. 분명한 것은 비핵화 이행조치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또 미국이 북한의 행동을 유인하는 조치를 모색하는 가운데, 남한이 북핵문제 해결 없이 경험과 지원 없다는 식의 압박은 역효과만 내는 처사라는 점이 드러나고 있다. 요컨대, 북핵문제는 9.19 공동성명에 근거한 동시행동원칙에 따른 포괄접근 기조를 유지하여야 한다. 구체적으로 6자회담 등 국제협력 방식을 주로 활용하면서 그 틀 안팎에서 필요시 남북대화를 보조축으로 취하는 것이 적합할 것이다.

XI.-4. 경험의 상대적 자율성 보장

경협 분야는 처음 이명박 정부의 주요 대북정책 영역으로 부상할 것으로 예상되었는데, 현재까지는 북핵문제 우선 방침에 따라 묶여있는 형국이다. 그러나 통일부의 업무보고에 자원개발협력 등 경제협력을 주요 사업계획으로 설정해놓고 있다. 문제는 이들 계획에는 자원개발협력을 제외하면, 2007 남북공동선언 등 남북이 합의한 주요 경제협력사업이 누락된 채 남한의 일방적 구상을 담고 있다는 점이다. 정부는 북핵에 종속되어 있는 경험의 발목을 풀어 그것이 갖고 있는 다양한 현재적, 잠재적 의의를 살려놓아야 한다. 그에 따라 정부는 남북 합의사항 및 기추진사업의 경과 등을 고려하여 경험 추진 판단기준을 재검토하고, 경험을 북핵문제 해결 노력과 병행하여 적극 추진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정책결정과정을 정부 관련 부처로 한정하지 말고 관련 기업의 입장과 여론을 수렴하기를 기대한다. 경험은 남북간 경제적 공동이익은 물론 통일대비 전략적 투자라는 인식을 분명히 하여 남북협력을 주축으로 하고 국제협력을 보조축으로 하여 적극 추진할 주요 대북정책 분야이다. 이 분야에서 CEO 출신 대통령의 역량과 실용주의 노선의 창의력을 기대해본다.

XI.-5. 인도인권정책: 분야별 창의적 접근

인도/인권 분야에서 북한인권, 탈북자 문제는 국제협력을 주로 활용하고, 대북 인도적 지원과 남북간 인도적 문제는 상대적으로 남북협력 방안을 주로 채택하는 것이 타당하다. 다른 한편, 이들 여러 인도/인권 분야들 사이에 상호연관성이 있다는 점을 감안해 통합적 정책추진 방향 및 체계를 수립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탈북자 문제는 그 제일 발생요인인 경제사정을 고려할 때 예방적 차원에서 인도적 지원 및 경제협력이 필요하고, 그 과정에서 북한대중의 인권 증진을 꾀하는 소위 인권에 기반한 접근(human rights based approach: RBA)을 취할 수 있다. 이를 전제로 각 사항들에 대한 기본 정책방향을 간단히 언급하면 다음과 같다.

- ▶ 보편적 북한인권문제 역시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 그럴 경우 북핵문제 미해결, 낮은 수준

의 남북간 신뢰관계 등을 고려하여 정부는 국제기구에서의 원칙적 언급을 넘어서 서울에서 북한을 직접 겨냥한 공개 발언은 자제하는 것이 필요하다. 다만, 북한의 인권상황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에 동참하고 실질적 인권개선을 위한 각종 기술협력, 인권대화를 지지하거나 추진할 필요가 있다.

▶ 탈북자 정책은 (잠재적) 탈북자의 존재 위치에 따라 예방, 기본권 보호, 정착 지원 등 세 차원에서 동시 추진된다. 그동안 소홀히 간주되어 온 탈북자 예방은 통합적 정책의 구성 부분으로서 인도적 지원, 경제협력, 인권에 기반한 개발사업 등을 통하여 실시할 수 있다. 이는 탈북자 발생 요인의 축소는 물론 지역 불안정 요인 해소, 남북간 신뢰구축 등의 효과도 가져올 것이다. 그러나 해외체류 탈북자에 대한 실태파악, 기본권 보호, 남한행 인도와 늘어나는 새터민의 정착 지원 등을 위해서는 관련국 및 UN 난민관무관실과의 협력관계 강화, 전담 외교관 및 전문인력의 증원이 필요하다.

▶ 인도적 문제에 관해서는 이명박 대통령의 해결 의지가 높다. 이 대통령은 3월 26일 통일부 업무보고 자리에서 “국군포로와 납북자 문제, 이산가족이 고령화하는 시점에서 이런 인도적 문제는 남북간에 대화를 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실제 통일부에서는 국군포로와 납북자 문제를 전담하는 조직이 설치되었고, 금강산 면회소 완공에 맞춰 이산가족문제도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인도적 문제와 대북 인도적 지원 문제는 모두 정치적 사안과 연계되지 않고 무조건성의 원칙에 따라 남북이 성실한 해결 노력을 보여야 할 것이다. 남한정부는 과거 서독의 정책을 원용해 물질적 보상, 비공개 협상 등의 방법을 포함하여 당사자와 가족의 한을 실질적으로 해소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 인도적 지원은 분배의 투명성 개선 노력을 취하면서 계속 전개해야 한다. 새 정부의 통일, 외교 주무 장관들이 인도적 지원에 정치적 판단으로 오해할 수 있는 발언을 하는 것은 자제할 필요가 있다. 그것은 인도적 지원의 본질을 훼손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북한에 분배 투명성 향상 요구를 지연하는 명분으로 이용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분배 투명성이 국제기구의 대북지원 경우와 비슷한 수준이 되어야 지원에 대한 여론의 지지가 가능할 것임을 북측에 설득하는 한편, 북한의 자생력 향상을 위해 개발 지원 및 협력으로의 방향 전환을 추진하여야 할 것이다.

5년 후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은 한반도 평화정착과 남북경제공동체 수립에 얼마나 기여했느냐 하는 것으로 평가될 것이다. 새 대통령과 정부의 대북정책 성향은 전임 정부의 정책을 교훈으

로 삼고, 상대방인 북한의 조건과 입장을 고려하면서 조정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점에서 이명박 정부는 실용주의가 보여줄 수 있는 유연성과 포용력을 십분 발휘하기를 기대한다. 새 정부가 출범 후 짧은 기간 동안 보이고 있는 연계, 단절, 무시 전략은 북한의 비협조와 같은 정책상 역효과와 북한의 미국 구애, 대내적 비판 여론 부상 등 부정적 정책 환경을 초래할 우려를 안고 있다. 이것이 조기에 조정되지 않고 보편주의, 상호주의 등 새 정부의 대북정책 추진원칙과 결합하여 지속될 경우 그 결과는 현 정부의 대북정책 결과로 국한되지 않고 미래 민족의 운명과 한반도 질서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용기 있는 자만이 성찰하고 그럴 때만 성공할 수 있다. 오히려 집권 초기 정책상 문제를 조기 발견하고 수정하는 것이 정책 성공을 보장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말미에 제시한 몇 가지 정책 건의가 대북정책 방향과 구체적 대안을 정교화 하는 데 일말의 보탬이 되기를 기대해본다. (2008/03/31)

<각주>

- 1)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이명박정부의 '글로벌 코리아' 구상에 대한 비판적 검토와 제언: 외교안보 정책과 대북정책을 중심으로,” 인수위 활동 평가와 정책 제언-제 2분과 외교안보통일정책 토론회 (2008. 2. 20, 서울).
- 2) 김지석, “3무 대북정책,” 『한겨레』, 2008. 3. 28.
- 3) 이것은 3월 하순 방미 일정 중 유명한 외교장관의 발언에서 나온 것인데, 미국의 대선 일정상 8월이 지나면 의미 있는 결정을 내리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그래서 북핵 신고를 수 주 내에 마무리 짓고 4월에 6자회담을 재개해 8월까지 북핵 폐기를 어느 정도 진전시켜야 부시 대통령 임기 내 미북 관계정상화와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 논의 등을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이다.
- 4) 혹은 ‘새로운 평화구조 창출(비핵)’과 ‘남북경제공동체 형성 진입(개방 3000)’의 결과 혹은 의미를 ‘한반도 평화통일의 실질적 토대 확충’으로 해석할 수도 있을 것이다.
- 5) 이에 대한 상세한 기록은 Charles L. Pritchard, *Failed Diplomacy: The Tragic Story of How North Korea Got the Bomb* (Washington, D.C.: Brooking Institution Press, 2007); 김연철·서보혁, 『실패한 외교: 부시, 네오콘, 그리고 북핵 협상』 (서울: 사계절, 2008, 근간) 참조.